

현시기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

고 인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군국주의는 해외팽창을 위한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본에서 군국주의세력이 자라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아세아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85권 498페이지)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과 그 교활성을 과학리론적으로 철저히 폭로하는것은 오늘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쏘미사이의 힘의 대결의 산물이었던 랭전이 종식되자 일본반동들은 이를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실현의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그 실현을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제문제에 마치도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경제분야에서 화려한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교활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해외팽창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현시기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 《반테로전에 대한 지원》의 간판밑에 일본《자위대》병력의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것이다.

교활성은 침략자, 략탈자들의 고유한 본성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수법의 하나는 바로 온갖 미사려구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환심을 얻어 그들의 반제계급의식과 반침략투쟁을 무마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저들의 흉악한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는것이다.

지난날 일제는 백인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아시아인민들의 사무친 증오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구호밑에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벌려 아시아태평양의 광활한 령토에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식민지제국인 《대동아공영권》을 창설하려고 미쳐날뛰였으나 결국 제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았다.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현시기 일본반동들은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승인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 《해외파병법》들을 조작함으로써 저들의 비법적인 행위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려 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전패국으로서 포츠담회담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결정한 일본의 법적, 국가적의무들에 대하여 모두 접수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였으며 그를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평화헌법》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패망후 복수주의야망으로부터 재생재무장책동을 감행하였으며
 팽전종식을 기화로 로골적으로 군사적해외팽창야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이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는것이였다.

1946년에 발포한 《평화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의 하나인 제9조에는 일본정부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정규무력과 기타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다.

일본반동들은 바로 이 조항을 뜯어고쳐 군사적해외팽창의 합법적길을 열어놓으려고
 하였으나 지난날 일제로부터 엄청난 불행과 재난을 당한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은 물
 론 국내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거세찬 항의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교활하게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 《반테로전에 대
 한 지원》 등의 간판밑에 해당 법들을 조작하고 실행함으로써 세계를 기만하고 군사적해
 외침략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려고 하고있다.

1991년 12월 일본반동들은 중의원본회의에서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안》을 가결하고 다음해 6월에 그것을 정식 결정함
 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래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병할수 있는 첫 합법적길을 열어놓
 았다. 2001년 10월에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강행통과시킴으로써
 군사적해외침략의 길을 더욱 넓혀놓았다. 특히 2015년에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
 보장관련법이 채택됨으로써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고 동맹국들에 대
 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평화헌법》은 사실상 휴지로 되어버렸다.

일본반동들은 이렇게 허울만 남은 《평화헌법》이 아직은 저들의 군사적해외팽창야망
 실현의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그 개악을 해외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공정으로 내세
 우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교활한 수법을 다 쓰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최근에 일본집권자가 들고나오고있는 《평화헌법》9조에 3항을 첨부
 하기 위한 책동이다.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의 주되는 목표인 9조 1항과 2항의 개악이
 야당들과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3항을 첨부하려고 책동하고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게 되면 그의 평화적성격은 자연히 약화되며 특히 헌법해석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모순(북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
 용과 이미전에 군종과 병종을 다 갖춘 공격무력으로 변모되고 해외에서 로골적으로 군사
 작전을 벌리고있는 《자위대》의 존재와 관련한 내용은 절대로 융합될수 없는 모순점이다.)
 의 해소를 구실로 9조 1, 2항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꿀수 있는 길을 터놓을수 있다. 일본
 반동들은 이런 수법으로 헌법개악을 기어코 단행하여 일본을 과거시기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마음대로 침략할수 있는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일본특유의 교활성의 하나가 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조작된 해외파병법들을 발판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책동에 적
 극 매여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파병책동은 새 세기에 들어와 《반테로전》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반동들은 2001년 10월 그 누구의 군사적보복작전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해상《자위대》의 구축함들인 《구라마》호와 《기리시마》호, 보급함 《하다마》호에 도합 700여명의 병력과 여러대의 직승기들을 탑재시켜 인디아양으로 파견하였다. 그후에 또다시 지원함 《도와다》호와 소해함 《우라가》호, 구축함 《사와기라》호를 증원무력으로 추가파견하였다.

일본반동들은 2003년 7월에도 직승기 탑재 구축함 《하루나》호, 구축함 《아사기리》호 등의 함선과 650여명의 병력을, 10월에는 해상《자위대》의 보급함 《도끼와》호와 2척의 호위함을 아라비아해에 파견함으로써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제정(2001년) 이래 총 28척의 함선과 5 600여명의 병력을 이곳에 파견하였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반동들이 《반테로전》에 대한 《지원》의 구실밑에 인디아양에 파견된 《자위대》무력의 군사작전보장을 위해 지출한 자금은 2004년말에는 약 360억US\$에 달하였으며 인디아양에 전개된 해상《자위대》소속 수송선들이 여러 나라 함선들과 직승기들에 공급한 연유량은 3억 8 300여만L에 달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밖에도 《유엔평화유지군》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 각종 교활한 명목밑에 해외파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이처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협력》, 《반테로전에 대한 지원》 등은 합법적파병의 길을 열어놓고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해외팽창을 다그치기 위한 교활한 침략수법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시기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령토강탈을 위한 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다.

파렴치성은 침략자, 략탈자들의 강도적본성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다. 력사적으로 침략자, 략탈자들은 파렴치성을 떼어놓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략탈해본적이 없다. 파렴치성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침략적본성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령토강탈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그 실현을 위해 발광하고있다.

독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자체도 인정하고있다. 2016년에 공개된 일본의 옛 지도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증명할수 있다. 1888년과 1892년에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용 지도들이 공개되었는데 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어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다. 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용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이기때문이었다. 이러한 실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독도를 한사코 저들의 령토라고 우겨대면서 그를 강탈하려는 야망을 버리려 하지 않는것은 그들의 파렴치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1997년 외교청서에서 일본외교 10대지침의 하나로 《독도탈환외교》를 설정하였으며 2004년 1월 일본의 집권자 고이즈미가 《독도는 일본령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어 그해 8월에는 다음해부터 《독도령유권》주장, 조선동해의 일본해표기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기 위해 7억 8 000만¥의 예산을 투입할것이라고 정부의 립장을 공식 천명한것을 비롯하여 독도탈환을 정책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였

다. 일본반동들은 2017년 외교청서라는데서도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또다시 주장해나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특히 일본의 청소년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역사교과서외국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그것은 새 세대들의 머리속에 독도를 《빼앗긴 땅》으로 인식시키자는데 있다.

2002년 4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빼앗기 담았으며 일본의 극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2005년에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2006년도 국민학교교과서에 독도사진을 게재하고 거기에 《다게시마》라고 명기하였고 문부과학성도 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죄악을 저질렀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010년에도 《독도령유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초등학교사회과목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으며 2011년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12종의 중학교사회과목교과서를 통과시켰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독도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다게시마의 날》을 맞으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책을 26만부나 출판보급하였으며 지역방송국을 통해 《다게시마의 날》조례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TV광고도 내보냈다. 2012년 9월에는 1주일 간에 걸쳐 외무성의 명의로 중앙과 지방의 약 70개 신문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광고를 내는 등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출판선전놀음도 벌려놓았다. 그리고 독도강탈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위대》를 동원하여 2000년부터 외딴 섬탈환훈련이라는것도 벌려놓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들은 2013년 《방위백서》에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다시금 쏘아박고(2005년부터 해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령유권》을 부르짖고있다.) 《독도령유권》주장을 담은 동영상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류포하였으며 독도가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경우 그것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단정하고 즉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내뱉는 등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로씨야의 꾸릴렬도도 강탈하려고 날뛰고있다.

꾸릴렬도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생겨난 쏘련과 일본사이의 령토문제이다.

1945년 2월 얄타협정에서는 쏘련의 대일참전의 정치적조건으로서 1905년 9월 포츠머스강화조약의 결과 로씨야가 일본에 빼앗겼던 짜할린의 남부와 그와 린접한 모든 섬 그리고 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준다는것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 1946년 1월 미점령군총사령부의 《각서 677호》, 1951년 9월 샌프랜씨스코강화조약 등에서도 일본이 꾸릴렬도를 비롯하여 포츠머스조약의 결과 획득한 짜할린의 일부 및 그 부근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것을 다시금 규정하였다. 그후 1956년에 체결된 쏘일공동선언에서 쏘련정부는 쏘일평화조약의 체결과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폐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을 반환할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 일본반동들이 공동선언리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쏘련은 일본에 항의각서를 보내어 《일본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하지 않는 한 쏘련은 하보마이, 쉬꼬판의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는것을 통고하였다. 그후 일본반동들이 《쏘련의 남하》, 《공산권

의 침략위협》을 운운함으로써 꾸릴렬도문제는 쏘일관계에서 더는 논의대상으로 되지 못하였다.

팽전종식후 소련의 붕괴를 남부꾸릴렬도강탈의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본반동들은 파렴치하게도 남부꾸릴렬도의 4개 섬을 북방에 있는 저들의 땅이라는 뜻에서 《북방령토》라고 명명하고 그 《령유권》을 주장해나섰다.

1996년 2월 20일 일본반동들은 내각회의에서 200mile경제수역을 결정하면서 남부꾸릴렬도주변수역이 200mile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하였으며 뒤이어 일본의 여러 신문들을 내세워 로일령토분쟁섬들인 남부꾸릴렬도의 이뚜루쁘와 꾸나쉬르, 쉬꼬판, 하보마이 섬들이 포함된 일본경제수역지도를 지면에 실어 발표하게 하였다.

2005년 7월에 있는 로씨야외무상의 일본방문시 일본반동들은 고압자세로 남부꾸릴렬도문제를 꺼들면서 로씨야가 4개 섬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였으며 그해 11월에 있는 로씨야대통령 뿌진 의 일본방문전과 방문기간 꾸릴렬도문제를 상정시켜 로씨야측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였다.

이처럼 령토강탈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안중에도 없이 령토팽창야망에 환장하여 마구 날뛰는 파렴치한 강도의 무리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경제적원조와 협조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서 그것은 호상신뢰에 기초할 때에만 진정한 원조와 협조관계로 될수 있다.

《원조》와 《협조》의 간판을 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인 교활한 침략수법이다.

일본반동들이 《경제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떠들고있는것은 일본경제의 《세계화》간판밑에 세계경제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먼저 다른 나라들의 주요경제명맥을 장악하고 나아가서 모든 경제부문들을 틀어쥐는 경제침략전략을 추구하고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해외직접투자가 그 주요한 실례이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단독기업을 설치하거나 현지기업을 매수병합하여 그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자본수출의 한 형태로서 이것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할뿐아니라 투자수입국의 주요경제명맥을 장악함으로써 그 나라를 예측시키기 위한것이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동남아시아시장을 틀어쥐기 위해 싱가포르에 진출시킨 새끼회사들이 제3국투자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 지역들에 설치한 기업수는 1995년현재 말레이시아에 45개, 인도네시아에 18개, 타이에 17개, 필리핀에 7개, 웰남에 3개로서 이러한 기업들은 금속가공기계, 정밀기계, 전자전기기계기구, 각종 기계부분품, 섬유,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생산하여 동남아시아시장에서 판을 쳤다.

일본반동들은 지역적인 경제기구들을 통하여서도 해외경제팽창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일본반동들이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TPP)을 성사시키기 위한것이다.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은 원래 2005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아페크틀거리내에서 체결한 것이었다. 그후 2014년까지 미국, 오스트랄리아, 웰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메히꼬가 협정교섭에 참가하였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에 참가한것은 2013년부터였다. 일본은 이 협정에 참가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이 차지하고있던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수 있다는 타산에서 2013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있는 교섭회의에 참가하였다. 2015년 11월 미국방문기간 아베는 국회연설에서 《TPP는 경제적인 우점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다. 전망적으로 볼 때 TPP의 전략적가치는 거대하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을 리용한 해외진출은 일본이 경제, 군사적으로 해외팽창을 다그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된다. 이로부터 일본은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을 기어코 성사시키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경제적예속이 정치적예속으로 이어진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고있는 심각한 교훈이다. 일본반동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함으로써 침략의 물질적토대를 구축하며 나아가서 해당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려 하고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이루지 못했던 《대동아공영권》창설야망을 달성하며 동시에 세계제패의 야망까지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해외팽창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으며 그들의 발광적인 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오늘의 아시아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오랜 기간 식민지노예로 짓밟히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첫째가는 침략대상으로 선정하고있는 우리 나라는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일제에게 통채로 나라를 빼앗기고 고스란히 식민지명예를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히 우리를 어찌보려고 움쩍하기만 하면 일본렬도를 단번에 태평양 깊은 바다속에 수장해버리고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것이다.

실마리어 《독도령유권》, 꾸릴렬도